

보도자료

사무총장 우 인 식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홈페이지: www.hanbyun.org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 제421회 수요집회 개최

-강제송환금지,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반대 기자회견-

일 시 : 2018. 7. 4. (수) 오전 11:00

장 소 :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14:00)

- 1. 지금 우리 사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무드 속에 마음껏 젖어 있습니다.
- 2.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 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탈북민을 강제북송하고 있고, 북한은 송환돼 온 탈북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는바, 이는 유엔 COI가 지적한대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합니다.
- 3.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또다시 지난 2016년 4월 한국으로 귀순해 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했고, 국내 일부 세력도 이에 동조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4.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지옥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정상국가 지도자인양 행세하고 미국마저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여 이번 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예년과 같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김정은의 지지율은 높기만 하고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폐쇄될 운명에 있습니다.
- 5. 이에 한변, 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서 평화무드 속에 가려진 참혹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7.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LHUK)

회장 김 태 훈